

한국 농업의 비전과 새로운 활로

개방시대의 우리농업 아직 초라. 성장·소득의 괴리현상 뚜렷
농업 미래 소비자 손에, 소비자 애정·산업계 후원 어우러져야

작년 말에 타결된 쌀 관세화유에 협상의 이행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외국쌀이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일본, 아세안(ASEAN), 멕시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 금년 말까지 윤곽이 드러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때보다 시장 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개방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농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초라한 모습이다. 벼농사 중심의 영세농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작목이 점점 축소되면서 일부 품목은 공급 과잉으로 만성적인 가격 침체에 빠져 있다. 농업교역조건은 계속 악화되어 도시근로자가 구 대비 농가소득은 7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젊은 농업인 후계자의 부족으로 농촌사

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더욱이 근년에는 자연재해도 늘어나 농업경영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UR 협상 때는 관세에 의한 국경보호와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은 점점 냉혹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농업도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진입해 있는 것이다.

개방시대 농업, 성장과 소득의 괴리

그렇다면 개방 시대의 농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 마디로 농업은 성장하지만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뚜렷해진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국경보호 장치를 통해 국내시장의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지지하여 왔

다. 그러나 열린 시장에서는 수입 농산물이 국내시장 가격의 상한을 형성하게 되므로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시장개방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UR 이후 농산물 수입은 연평균 2.5% 정도씩 증가하였으며, 1995~2002년간 농산물 가격 하락의 원인은 국내 공급 증가가 77%이고 나머지 23%가 수입 증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농업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UR 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농업의 어려움을 시장개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1990년대 초부터 시행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힘입어 농업 생산성은 증대한 반면 농산물 소비는 정체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공급과잉에 고민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와 수출보조를 줄이기 위한 농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생산성 증가와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농가의 경영 전략은 단위 면적 당 소득 감소에 상응하는 만큼 영농규모를 늘려 총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지 규모나 시설장비를 확충하기 어려우므로 구조조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개방 속도에 맞추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정책이 중요하게 된다. 또, 농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면, 영농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의 한계농기부터 경작을 포기하여 점차 전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렇게 되면 농업생산을 통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홍수조절, 수원함양, 토양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토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재

정부담으로 지역농업의 절대규모를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시장개방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은 증가하지만 농가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 유지를 위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1인당 연간 직접지불액은 약 1천 달러 정도로서, EU에 비해서는 3분의 1, 일본에 비해서는 5분의 1, 미국에 비해서는 8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가의 직접지불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 결국 농업 지원에 대한 소비자·납세자의 애정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은 시장개방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선진 농업의 실현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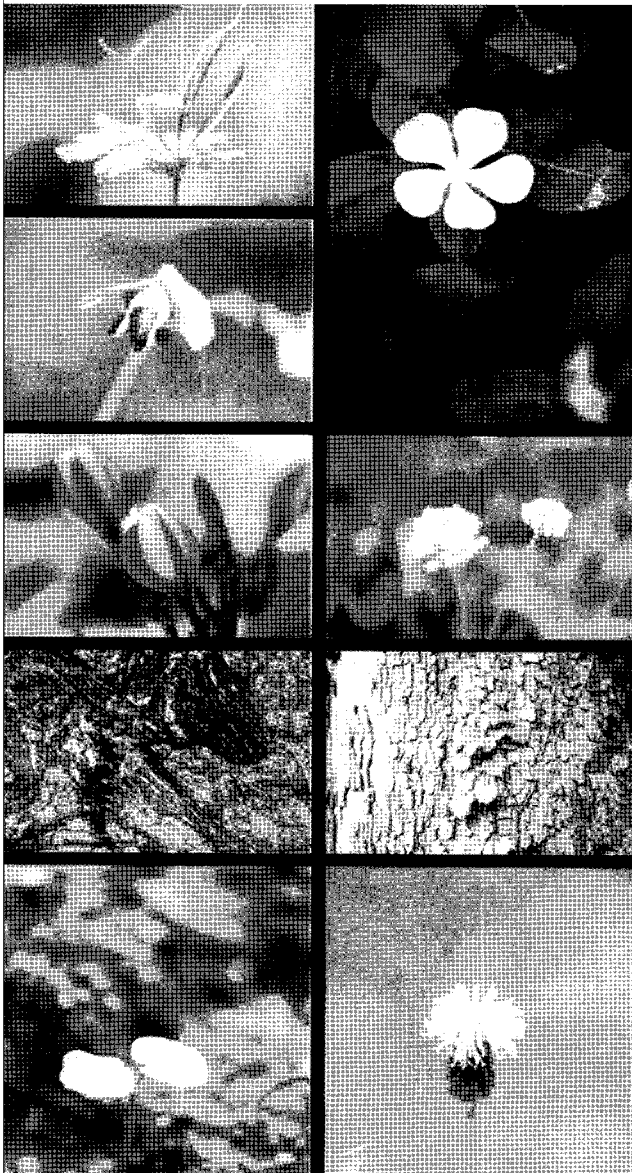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농업 발전 가능성과 4대 혁신방향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계 모두가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생산면에서 보면,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조건을 토대로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개방화 시대의 농업 문제는 농업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소비자의 애정과 산업계의 후원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성원과 농업계의 혁신 노력이 어우러져 한국 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며, 이미 채소와 과수 그리고 화훼 등은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생명공학(BT), 전자공학(IT)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농산물 소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식품 소비가 다양화되고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농산물의 비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 소비자의 구매력이나 구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구매시장이 적은 편이 아니다. 나아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의 경제력 향상으로 농산물 수출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고소득 계층을 겨냥한 공세적 수출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발전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미래의 비전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코스트 혁신, 상품 혁신, 마케팅 혁신, 서비스 혁신 등 4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코스트 혁신이다. 원가 절감은 가격 경쟁력과 총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기계화와 시설자동화 그리고 재배(사육) 방법의 생력화 기술을 도입하여 노력비 절감과 규모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고정비용을 분산시키고, 표준화·규격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 사업연합 등의 조직화를 통하여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규모경제와 범위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

둘째는 상품 혁신이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고급화로 상품 차별화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채용하여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전공학(BT)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식품을 개발하며,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가공·예냉·저장·포장 등 수확후 관리기술을 채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그리고 특정한 소비자를 겨냥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고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마케팅 혁신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거래를 추진하여 수취가격을 높이며, 계열주체 중심의 계약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품을 브랜드화하고 유통업체에 안정 공급함으로써 대량거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마케팅을 주도하면서 농가는 고품질 상품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특히 소비자 유통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적품·적기·적소·적량 공급 등이 중요하며, 농산물 수출입에서도 가격 경쟁력보다 마케팅 능력이 좌우하고 있다.

넷째는 서비스 혁신이다. 우리 농산물과 식품에는 농촌의 전통과 문화가 배어 있으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도 농업인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서비스 활동이다. 또, 도시민에게 농촌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소비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사주지 않는다면 개방화 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농업 비전 실현 위한 파트너십 필요

세계 농업이 변하고 있다. 그 흐름을 보면, 첫째, 농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능으로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경제외적 가치, 즉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를 중시하는 경향이다. 둘째로, 농정의 대상이 개인이나 농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옮겨가는 경향이다. 개별 경영체의 육성과 아울러 이들이 체계적으로 엮어진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농정 수단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주의가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농정이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생산자조직이 서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미래 농업에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2008년까지 51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투융자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농업관련 조직의 개혁을 추진하여 저비용·고효율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다.

개방화 시대의 농업 문제는 농업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소비자의 애정과 산업계의 후원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성원과 농업계의 혁신 노력이 어우러져 한국 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Y